

일본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증강 추세

송화섭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탈냉전 이후 일본은 냉전시대의 방위정책인 기반적 방위력 개념에 입각한 '방위계획의 대강' ('76대강)을 1995년('95대강) 및 2004년('04대강)에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고 올해 말을 목표로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 수립을 앞두고 있다.

군사전략의 의미를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억지·저지하기 위하여, 또는 전쟁이 발발하였을 경우 그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군사력과 그 밖의 요소를 준비·계획·운용하는 방책'으로 이해한다면, 일본은 전수방위전략과 미일동맹의 활용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군사전략을 견지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1956년에 발표된 '국방의 기본방침'에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국방의 기본방침의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50여 년간 일본 군사전략의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의 책정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적기지공격능력, 남서방면 중시, 미일동맹 역할분담의 유연성 등을 검토해 보면 전수방위전략에서 보복적 억지전략, 선제공격 전략으로 군사전략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으며, 미일동맹에 있어서도 단순한 후방지원 역할에서 작전을 보완해 주는 역할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대까지의 동북아 군비경쟁이 군사력 현대화를 계기로 전개되어 왔다면, 2010년대의 동북아 군비경쟁은 본격화되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일본의 새로운 군사전략의 채택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지역에 형성될 새로운 성격의 군비경쟁 구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국이 느끼게 될 안보딜레마를 평가하면서 동북아지역의 안보협력대화의 계기로 활용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

목 차

- 1.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전략
- 2. 일본 군사전략의 변화
 - 가. 전수방위 전략의 수정
 - 나. 위협 인식의 변화와 군사 전략의 수정
- 3. 일본 군사력의 증강 추세
 - 가. 일본 군사비의 증가 추세
 - 나. 일본 군사력 증강 추세
- 4. 군사전략 변화와 군사력 증강의 연관성과 함의

1.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전략

- 탈냉전 이후 일본은 냉전시대의 방위정책인 기반적 방위력¹⁾ 개념에 입각한 ‘방위계획의 대강’ (‘76 대강’)을 1995년(‘95대강’) 및 2004년(‘04대강’)에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고 올해 말을 목표로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 수립을 앞두고 있음.
 - 일본의 방위계획 작성체계에 따르면 통합막료장은, 정보본부의 ‘통합 장기 정보전망’과 기술연구본부의 ‘중장기 기술전망’에 입각하여 ‘통합 장기 방위전략’²⁾을 작성하고, 이 문서와 정보본부의 ‘통합 중기 정보 전망’을 바탕으로 ‘통합 중기 방위구상’³⁾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통합 중기 방위구상에 따라 육·해·공 자위대의 막료장은 각 자위대의 ‘중기 능력 전망’을 작성하고 통합막료장은 ‘통합 중기 능력 전망’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서들에 기반하여 정부 계획인 방위계획의 대강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약칭 중기방)이 작성됨.
 - 1986년부터 시작된 중기방은 86중기방, 91중기방, 96중기방, 01중기방을 거쳐 다섯 번째 05중기방⁴⁾이 완료된 상태이며, 2010년에 발표될 대강에 따라 11중기방이 작성될 예정임.
- 일본의 방위계획 문서 중에서 방위계획 대강과 중기방만이 일반에게 공개되므로 일본의 군사전략 분석은 이들 문서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문서가 군사력 건설과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04대강의 경우, △안보환경 평가, △안전보장의 기본방침(=안보전략), △방위력의 지향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보환경 평가 및 안보전략이 군사력 건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음.
 - 안보전략의 경우, 안전보장의 목표로서 일본의 방위와 국제안전보장 환경의 개선이라는 2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일본 자신의 노력, 동맹국과의 협력,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세 가지의 어프로치를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여, 소위 2 X 3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군사력 건설과의 연계성은 약함.

- 05중기방의 경우, 군사력 건설과 관련하여 △통합 운용의 강화, △정보 기능의 강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제시하는데 머무르고 있음.
- 군사전략의 의미를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억지·저지하기 위하여, 또는 전쟁이 발발하였을 경우 그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군사력과 그 밖의 요소를 준비·계획·운용하는 방책’으로 이해한다면, 일본은 전수방위전략과 미일동맹의 활용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군사전략을 견지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기본전략은 1956년에 발표된 ‘국방의 기본방침’⁵⁾에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국방의 기본방침의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50여 년간 일본 군사전략의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고도 볼 수 있음.
- 그렇다면 그간의 방위정책 변화는 군사전략의 변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이 제기됨. 따라서 여기서는 일본의 군사전략을 전수방위 수준의 전략과 위협에 대한 대응 수준의 전략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기로 함.

2. 일본 군사전략의 변화

가. 전수방위 전략의 수정

- 전수방위란 상대방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행사방법에 있어서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보유하는 방위력도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한다는 것으로 방위백서에서 밝히고 있음.
- 전수방위전략은 일본이 방어능력을 전담하고, 미일동맹이 적에 대한 타격능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 방위백서에서는 ‘본격적인 침략사태에 대한 대비’라는 이름으

전수방위 전략은
방어는 일본이 적에 대한
타격능력은 미일동맹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

최근 전수방위 전략은

거부적 억지전략,

보복적 억지전략,

선제공격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음

로 착·상륙침공 대처능력을 소개하고 있는데, 방공작전, 주변 해역 방위작전, 육상방위작전이, 종래에는 주로 미국이 도와주러 올 때까지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점에 중점을 두었음.

- 이후 일본이 독자적 방어능력을 확보하면서 소규모 사태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격퇴한다는 전략을 채택함.

○ 전수방위전략은 미국의 보복적 억지력에 의존하는 순수한 방어 전략이었으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MD체제를 도입하면서 거부적 억지전략으로, 적기지 공격론을 제시하면서 보복적 억지전략으로,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선제공격전략으로 변화되고 있음.

- 자민당이 2009년 6월에 발표한 ‘제언: 신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하여’⁹⁾에서는 예방적 선제공격은 부인.

- 적기지 공격을 위해서는 피해 범위 조절이 가능한 통상탄두 정도의 위력과 피해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높은 정밀도, 효과 확인 가능한 수준의 능력 보유 필요.

- 정보체제 강화를 기반으로, 일본의 우주과학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결집하여 정보수집위성과 통신위성시스템에 의해 목표 정보를 받아, 순항미사일 혹은 소형 고체로켓 기술을 이용한 비상체(즉응성보다 비닉성을 중시한 순항형 장사정 미사일 혹은 신속한 즉응성을 중시한 탄도형 장사정 고체로켓)에 지령하여 정확하게 탄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표 1〉 군사전략의 변화

일본의 군사전략		소요 군사력
전수방위전략		자력 + 미일안보
억지전략	거부적 억지	자력 + 미일안보 + 미사일 방어
	보복적 억지	자력 + 미일안보+미사일 방어 + 적기지 공격 능력
선제공격 전략	선제타격 (preemptive strike)	자력 + 미일안보+미사일 방어 + 적기지 공격 능력
	예방적 타격 (preventive strike) (*예방적 선제공격은 부인)	자력 + 미일안보+미사일 방어 + 적기지 공격 능력

※ 문제는 일본이 선제 적기지 공격능력까지 고려하면서도 전수방위 개념이 생기기 이전의 1956년의 하토야마 내각의 해석에 따라 전수방위와 양립한다는 혼란스러운 주장을 하는 것임.

- 전수방위란 용어는 1970년 10월 처음으로 발표된 방위백서에서 언급되면서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내지 기본정책으로 자리 잡음. 1970년판 백서에서는 ‘전수방위의 방위력’ 부분에서 ‘일본의 방위는 전수방위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고, 전수방위란 ‘헌법을 지키면서 국토방위에 전념한다는 것’임을 밝힘.

- 1972년 다나카 수상(田中角榮)은 전수방위란 ‘방위상의 필요에서도 상대 기지를 공격하지 않고 오직 일본 국토 및 그 주변에 있어서 방위를 하는 것으로, 이것은 일본 방위의 기본적인 방침이며, 이러한 기본 개념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언급.

- 1981년 기무라(木村) 방위청장관은 ‘상대방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행사방법에 있어서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하며, 보유하는 방위력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등, 헌법의 정신에 따른 수동적인 방위전략 자세를 말한다’고 답변하면서 이후 정착됨.

- 즉 〈표2〉와 같이 최초의 전수방위 개념에는 적기지공격이나 선제공격 개념이 포함되지 않았고, 현재의 전수방위 개념이 되고 있는 기무라 장관의 발언으로도 적기지공격론이나 선제공격론은 정당화되기 힘들.

〈표 2〉 전수방위 개념의 개념 변화

		전수방위	적기지 공격	선제공격
하토야마 수상 (1956)	유도탄 공격이 있을 경우, 유도탄 기지를 공격할 수 있음		○	×
다나카 수상 (1972)	방위상의 필요에서 상대기지를 공격하지 않고 오직 국토 및 주변에서만 방위를 하는 것.	○	×	×
기무라 장관 (1981)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행사방법에 있어서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보유하는 방위력도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	○	△	×

중국의 부상으로 특히 남서해역 해상 및 제공권 확보를 위해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 및 강화를 추진

나. 위협 인식의 변화와 군사전략의 수정

- 1)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처 - 남서방면 중시 전략
 - 냉전시대 구소련의 위협에 대비한 북방중시전략에서 탈냉전 이후 중국을 의식한 남서방면 중시전략으로 전환.
 - 중국은 다극화를 향하여 군사력(핵, 미사일전력에 더하여, 항모 등 해상 프레젌스·착상륙 능력의 비약적 향상 등)의 확충(공표 군사비는 21년 연속 2자리 수의 신장,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최대 증가율은 24%)과 동아시아의 패권경쟁, 특히 동지나해, 남지나해로부터 태평양으로의 진출 움직임이 있다고 평가됨.
 - 대만해협의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공군력 특히 미사일 능력의 현대화는 계속되고 있어서, 중국-대만 간의 군사력 균형, 나아가 동지나해에서의 일중 간의 군사력 균형, 광역의 아태지역에서의 미중 간의 군사력 균형이 변화될 것으로 우려.
 - 남서제도의 방위를 위해 △상비부대의 주요 도서 배치 및 신속한 기동전개 능력 확보(요나구니 섬에 육상자위대 레이더기지 건설 계획 등) △도서 방위를 위해 일본의 장사정 화력의 정비와 적의 장사정, 정밀화력에 대한 방공능력 강화(헬기탑재 구축함의 확보로 연결) 등이 요구되고 있음.
 - 남서항로대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공대함, 함대함, 지대함 미사일의 통합운용이 필요하고, 미사일 사정거리 및 낮은 증속성(비상 시간이 길기 때문)을 보완하기 위해 지대함 탄도미사일(중국은 개발 착수)의 연구개발 필요.
 - 남서해역(남서제도에서 혼슈~유황도~괌에 이르는 해역)에서의 해상 및 제공권 확보를 위해서는 남서제도와 남서 항로대에 배치, 운영되는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을 강화할 것이 주장됨.
- ※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는 군사전략의 변화 뿐만 아니라, 대중 견제와 관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역 안보협력 정책 추진.

- 견제정책의 차원에서는 미국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화 대형 네트워크 협력을 추진.
- 관여정책의 차원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비전통적 위협을 대상으로 하는 역내의 안보협력기구 추진.

2)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보완 - 미일역할 분담의 유연성 확보전략

- 일본은 미국이 1990년대부터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힘을 과시해 왔고 미국의 절대적인 우위는 현재도 가까운 미래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테러활동과 이라크에 대한 무력행사 등에 따라 군사적 부담이 증대하고 있으며, 일국주위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 위신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음.
- 군사적으로도 미국은 지금까지 글로벌 커먼즈(Global Commons)⁷⁾라는 국제 공공 공간을 통제해 왔고, 이 능력이 미국으로 하여금 내외의 분쟁에 관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세계 거의 전역에서 미국은 어느 국가의 도전도 허락하지 않는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도록 하였으나, 특정의 지역에서는 미국의 개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 일본은 미국의 절대적 우위의 저하를 인식하고 있지만, 미국이 글로벌 커먼즈를 유지하고 계속 안보적 측면의 국제공공재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미정책을 설정하는 추세임.⁸⁾
- 따라서 미일역할분담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미국의 타격력에 대해 자위대의 지원, 보완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타격부대의 원호(대함, 대공, 대지, 대잠 공격능력)와 정보수집 지원, 후방지원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

미일역할분담의 유연성 확보위에 미국의 타격력에 대한 자위대의 지원 및 보완능력 향상 추진

3) 국제안보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 국제적 역할확대 전략

- 04대강 이후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개편되고, 국제평화협력작전

낮아진 전면전

가능성과 재정내실화

방침으로 현대화된

탈냉전형 군사력 건설 중

이 자위대의 본래 임무로 규정되면서 자위대 중앙즉응집단이 해외파견 임무를 띠게 되었음.

- 이것을 계기로 해외작전에 유용한 보급함, 대형수송기 등의 정비에 초점을 두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해외작전 수행에 적합한 군사력 정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4) 낮아진 대규모 전면전의 가능성 - 탈냉전형 군사력 건설 전략

- 04대강에서 테러 등 비국가 주체에 의한 위협 등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의 등장에 초점을 맞추고, 대규모 전면전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함.

- 따라서 냉전형의 대기갑전, 대잠전, 대항공침공을 중시한 정비구상에서 탈비하여, 장비와 요원을 감축하고, 기술혁신의 성과에 따라 전차, 화포,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호위함, 잠수함, 소해정, 초계기 등을 정비한다는 방침을 제시(재정 내실화(骨太) 방침: 고이즈미 노선).

-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미사일 방위체제 도입의 영향도 있었으나, 그 결과 자위대의 인원과 장비가 양적으로는 감소.

3. 일본 군사력의 증강 추세

가. 일본 군사비의 증가 추세

- 탈냉전 이후 일본의 방위비는 1990년대에 약 25%⁹⁾의 증가를 보였으나, 2000년대에는 4.4%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음. 일본 방위비 감소는 성장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가 큰 요인이었으나, 재정 압박에 따른 소위 '재정 내실화 시책'이 큰 영향을 미쳤음.

- 1990년대의 방위비가 25%나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27%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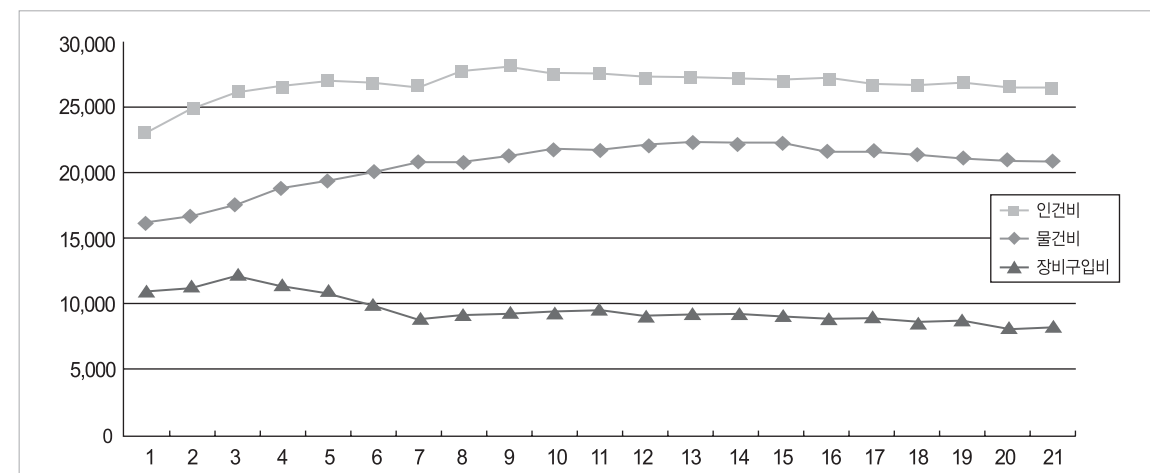
GDP 성장을 배경으로 한 것이지만, 2000년대의 경우 2.8%의 GDP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

- 특히, 2000-04년간에는 GDP 0.9% 증가에 대해, 방위비는 0.9%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2004-09년간에는 GDP 2.8% 증가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는 4.4%나 감소하여 04대강의 탈냉전형 군사력 건설 전략이 영향.

- GDP 대비 군사비 비율은 1989년에 1.01%, 1999년 0.99%였으나, 2009년에는 GDP의 0.9% 수준.

나. 일본 군사력 증강 추세

- 병력의 경우, '76대강에서 육상자위대 18만명의 정원을 갖고 있었으나, '95대강에서 16만명으로 감축되고 '04대강에서 다시 15만3천명 체제로 감축됨.



- 자위대 병력은 2007년 기준 24만86백명이나, 현재원은 23만명 수준으로 1만명 이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육상자위대는 15만3천명 정원에 14만명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의 군사비 감소와 병력 감소가 반드시 일본의 군사력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일본은 통합운용의 강화 등으로 군사력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표 3〉 일본의 군사비 변화 추세

(단위: 억 엔)

연도 Year	국내총생산 GDP	총계 Total	인건비 Personnel and provisions	물건비 Commodities	장비구입비 Equipment	
					장비구입비 Equipment	연구개발비 R&D
1989	3,897,000	39,198	16,136	23,063	10,977	828
1990	4,172,000	41,593	16,680	24,913	11,403	929
1991	4,596,000	43,860	17,568	26,293	12,162	1,029
1992	4,837,000	45,518	18,808	26,711	11,419	1,148
1993	4,953,000	46,406	19,396	27,011	10,792	1,238
1994	4,885,000	46,835	19,975	26,861	9,986	1,255
1995	4,928,000	47,236	20,714	26,522	8,699	1,401
1996	4,960,000	48,455	20,760	27,695	9,157	1,496
1997	5,158,000	49,414	21,260	28,154	9,347	1,605
1998	5,197,000	49,290	21,739	27,551	9,442	1,277
1999	4,963,000	49,201	21,674	27,527	9,629	1,307
2000	4,989,000	49,218	22,034	27,183	9,141	1,205
2001	5,186,000	49,388	22,269	27,119	9,178	1,353
2002	4,962,000	49,395	22,273	27,122	9,206	1,277
2003	4,986,000	49,265	22,188	27,077	9,028	1,470
2004	5,006,000	48,764	21,654	27,110	8,806	1,707
2005	5,115,000	48,301	21,562	26,739	9,000	1,316
2006	5,139,000	47,906	21,337	26,570	8,594	1,714
2007	5,219,000	47,818	21,018	26,801	8,663	1,445
2008	5,269,000	47,426	20,940	26,486	8,133	1,728
2009	5,102,000	47,028	20,773	26,255	8,252	1,198

〈표 4〉 자위대 병력 변화 추이

연도	총계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통막
1989	246,544	156,100	43,967	46,317	160
1990	234,177	148,413	42,245	43,359	160
1991	240,266	151,176	43,538	45,392	160
1992	237,557	150,339	42,238	44,820	160
1993	233,818	146,114	43,032	44,512	160
1994	239,637	151,155	43,748	44,574	160
1995	242,693	152,515	44,135	45,883	160
1996	242,709	152,371	43,668	45,336	1,334
1997	242,640	151,836	43,842	45,606	1,356
1998	236,368	145,928	43,838	45,223	1,379
1999	236,315	146,780	43,323	44,775	1,437
2000	239,807	148,676	44,227	45,377	1,527
2001	239,839	148,197	44,404	45,582	1,656
2002	239,806	148,226	44,375	45,483	1,722
2003	238,579	146,960	44,390	45,459	1,770
2004	239,430	147,737	44,327	45,517	1,849
2005	240,812	148,302	44,528	45,913	2,069
2006	240,970	148,631	44,495	45,733	2,111
2007	230,291	138,422	44,088	45,594	2,187

- 장비면에서는 함정의 경우 척수는 조금 감소하였으나 함정 톤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함정의 대형화 추세를 잘 반영해 주고 있음.
- 항공기와 전차의 경우, 04 대강의 영향으로 04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기동력 향상을 위해 각 자위대의 헬기 보유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음.
- 전차의 경우 1/3 정도가 감소되었으나, 장갑차의 경우 국제평화협력작전과 기동성 향상을 위해 경장갑기동차의 증가로 보유수 증가하였음.

〈표 5〉 주요 장비의 변화 추이

연도	합정				항공기						전차 등		
	톤수	척수총계	호위함		육자		해자		항자		전차	자주포	장갑차
			호위함	잠수함	고정익	회전익	고정익	회전익	고정익	회전익			
1989	277,000	162	55	14	17	400	90	81	383	39	1,220	640	640
1994	326,000	160	61	15	16	453	103	115	437	43	1,180	670	730
1999	358,000	140	53	16	16	486	107	108	444	54	1,090	640	710
2004	414,000	152	53	16	16	495	104	108	453	57	1,000	500	1,300
2008	449,000	149	52	16	12	452	100	105	445	55	880	290	1,860

○ 장비 보유숫자의 국가간 비교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4세대 전투기 보유숫자의 비교는 일본이 양안관계의 군사적 균형을 평가할 때 자주 인용하는 지표임. 중국은 2007년에 4세대 전투기 보유숫자에서 대만을 앞지르기 시작했으나, 일본과는 질과 양 측면에서 아직은 열세임.

〈표 6〉 일본, 중국, 대만의 4세대 전투기 보유 현황

	일본	중국	대만
제4세대 전투기	369	347	331
비교	F-15J/DJ : 203 F-4EJ : 90 F-2A/B : 76	J-10 : 84 Su-27 : 166 Su-30 : 97	미라주 2000 : 57 F-16 : 146 經國 : 128

○ 4세대 전투기 보유숫자에서 상정되듯이 일본은 미일동맹의 영향으로 최첨단의 군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요인 등으로 지난 10년간 군사력 증강 속도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질적으로 우수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일본은 현재 제5세대 전투기인 F-35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THADD 도입을 통한 미사일 방위시스템의 증강을 고려하고 있음.

또한 남서방면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헬기탑재 대형구축함을 증강시킬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 2000년대부터 강조해 온 정보수집기능의 강화와 C4ISR 체계의 완비를 위해 2009년 1년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기본 방침을 발표하기도 하였음.¹⁰⁾

〈표 7〉 2009년 방위력 정비 중점

안보환경을 감안한 방위력의 질적 향상	○ 방공능력 향상을 위해 F-15 전투기의 개량 ○ 경계감시능력 향상을 위해 조기경계관제기(E-767)의 레이더 기능 향상 ○ 고성능 스텔스기 연구를 통해 군사력 선진기술 확보
국제평화협력작전 체제의 강화	○ 이동식 의료시스템 정비 등 국제평화협력작전을 위한 장비품 개선 ○ 국제평화협력센터 정비를 통해 국제평화협력작전에 대한 홍보 강화 ○ 아태지역의 전략적 안보대화·방위교류 추진
새로운 위협/다양한 사태에 대한 대응	○ FPS-5 레이더 정비 등 탄도미사일 공격 대응 강화 ○ 혼성단의 여단화 등 작전기본부대 개편 ○ 기동방해시스템 연구 등 게릴라 및 특수부대 공격 대응 ○ 수송용 헬기(CH-47JA) 등 대규모, 특수재해 등에 대응
우주개발이용/해양안전을 위한 노력	○ 우주정책실 신설 등 우주개발 이용을 위한 대처 ○ 해양법 전문가 양성 등 해양기본계획에 입각한 대처
군사과학기술 진전에 대한 대응	○ 자위대 디지털통신시스템 개발 등 미래 장비기술의 연구개발 ○ 해상자위대 정보과 신설 등 정보기능 강화 ○ 자위대 통합지휘시스템 정비 등 고도의 정보통신태세 구축

4. 군사전략 변화와 군사력 증강의 연관성과 함의

○ 일본의 군사전략은 전수방위와 미일동맹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탈냉전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국제평화협력작전 등 국제적 역할 강화 전략이 군사력 건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음.

한국은 일본의 군사전략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여 동북아 지역 안보협력 대화의 계기로 활용해야 함

-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이 미사일 방위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거부적 억지전략으로 군사전략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04대강 이후의 '탈냉전형 군사력 건설 전략'이 2000년대 후반의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큰 변수로 작용하였음.
- 큰 틀에서 보면 지난 50여 년간 일본은 전수방위와 미일동맹을 축으로 군사력 건설에 매진해 왔으며 이는 군사기술 발전에 따른 군사력 현대화 차원에서 군사력 건설이 진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의 책정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적기지공격능력, 남서방면 중시, 미일동맹 역할분담의 유연성 등을 검토해 보면 전수방위전략에서 보복적 억지전략, 선제공격 전략으로 군사전략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으며, 미일동맹에 있어서도 단순한 후방지원 역할에서 작전을 보완해 주는 역할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한편 일본 남서해역의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장거리 공격능력을 포함한 군사력 투사 및 해양거부전략을 전개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2000년대까지의 동북아 군비경쟁이 군사력 현대화를 계기로 전개되어 왔다면, 2010년대의 동북아 군비경쟁은 본격화되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일본의 새로운 군사전략의 채택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됨.
- ※ 자민당의 경우 군사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새로 집권한 민주당의 방위정책은 아직 불투명함. 따라서 동북아의 새로운 군비경쟁시대의 도래는 늦어질 수도 있음.
-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지역에 형성될 새로운 성격의 군비경쟁 구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국이 느끼게 될 안보딜레마를 평가하면서 동북아지역의 안보협력대화의 계기로 활용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자료>

<표 8> 04대강의 구성

I. 취지		
II.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	1. 세계 질서의 변화	- 테러 등 비국가주체에 의한 위협 등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 등장 -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지위 유지
	2. 주변국의 동향	- 극동러시아: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 존재 -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 대규모 특수부대 보유→지역의 중대한 불안정 요인 - 중국: 핵·미사일 전력, 해·공군력 근대화, 해양활동범위 확대→지역 안보에 큰 영향력 보유
	3. 안보 위협의 평가	- 본격적인 침략 가능성 저하 -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
	4. 일본의 전략적 여건	- 중심이 짧고, 긴 해안선, 많은 도서 보유 - 산업, 인구의 집중, 많은 자연재해 - 해상교통로 방어 필요
III. 일본의 안전보장 기본방침	1. 기본방침	- 안보목표: 일본 방위, 국제적인 안전보장환경의 개선 - 전수방위, 비군사대국, 문민통제, 비핵3원칙 준수 - 핵위협: 미국의 억지력에 의존, 핵군축, 비확산 노력
	2. 일본 자신의 노력	(1) 기초 (2) 국가로서의 통합적 대응 (3) 일본의 방위력 - 기반적 방위력 구상 계승 - 다기능, 탄력적, 실효적 방위력
	3. 미일 안전보장 체제	- 미일 간 전략적 대화의 실시(전략목표, 역할분담 등) - 미일안보체제 강화(정보교환, 운용협력, MD 등)
	4. 국제 사회와의 협력	- ODA의 전략적 활용, PKO에 적극 참여 -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 유엔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개혁에 노력 - 아태지역에서 ARF, 대테러, 대해적 협력
IV. 방위력 기초	1. 방위력의 역할	(1)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대한 실효적 대응 ①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② 게릴라 및 특수부대 공격에 대한 대응 ③ 도서부 침략에 대한 대응 ④ 주변 해공역의 경계 감시 및 영공침범 및 무장공작선에 대한 대응 ⑤ 대규모 특수재해에 대한 대응 (2) 본격적인 침략사태에 대한 대비 (3) 국제적 안보환경 개선을 위한 주체적 적극적 노력
	2. 방위력의 기본적 사항	(1) 통합 운용의 강화 (2) 정보 기능의 강화 (3)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 (4)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V. 유의사항		
※ 무기수출3원칙의 완화 (관방장관 담화)		BMD시스템에 한하여 미국과 공동 개발, 생산이 가능

〈표 9〉 방위계획 대강의 별표

		1978년 방위계획대강	1995년 방위계획대강	2004년 방위계획대강
육상 자위대	편성정수	18만인	16만인	15만5천인
	평시지역배비	12개 사단	8개 사단 6개 여단	8개 사단 6개 여단
	기동운용부대	1개 기갑사단 1개 공정단 1개 헬리콥터단	1개 기갑사단 1개 공정단 1개 헬리콥터단	1개 기갑사단 中央應急집단
	지대공유도탄부대	8개 고사특과군	8개 고사특과군	8개 고사특과군
	전차 및 화포	1200량	전차 900량 약 900문	약 600량 약 600문
해상 자위대	호위함부대 (기동운용)	4개 호위대군	4개 호위대군	4개 호위대군 (8개대)
	호위함부대 (지방함대)	10개대	7개대	5개대
	잠수함부대	6개대	6개대	4개대
	소해부대	2개 掃海隊群	1개 掃海隊群	1개 소해대군
	초계기부대			9개대
	호위함	약 60척	약 50척	47척
	잠수함	16척	16척	16척
항공 자위대	작전용 항공기	220기	170기	약 150기
	항공경계관제 부대	28개 경계군 1개 비행대	8개 경계군 20개 경계대 1개 비행대	8개 경계군 20개 경계대 1개 경계항공대 (2개 비행대)
	요격전투기부대	10개 비행대	9개 비행대	전투기부대 12개 비행대
	지원전투기부대	3개 비행대	3개 비행대	
	항공정찰부대	1개 비행대	1개 비행대	1개 비행대
	항공수송부대	3개 비행대	3개 비행대	3개 비행대
	지대공유도탄부대	6개 고사군	6개 고사군	6개 고사군
	공중급유·수송부대			1개 비행대
	이 가운데 전투기	430기	약 400기	약 350기
탄도미사일방위 주요 장비, 기간부대	이지스시스템탑재호위함			4척
	항공경계관제부대			7개 경계군 4개 경계군
	지대공유도탄부대			3개 고사군

주 석

- 1) 기반적 방위력 구상이란 76대강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스스로 힘의 공백을 만들어 일본 주변지역에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도록 독립국으로서의 필요 최소한의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것임
- 2) 통합 장기 방위전략은 5년마다, 5년 이후 약 15년간을 대상으로 △안보환경전망, △방위전략, △방위력의 질적 방향에 대해 작성됨
- 3) 통합 중기 방위구상은 5년마다, 2년 이후 약 5년간을 대상으로 △위협분석, △방위구상, △방위력 정비의 중시 사항에 대해 작성됨
- 4) 01중기방은 04년 대강의 발표로 4년만에 종료되고, 05중기방이 새로 수립됨
- 5) 국방의 기본방침 제3호에서는 국력·국정에 상응하고 자위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정비한다, 제4호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서는, 장래 유엔이 유효하게 이를 저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는,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를 기조로 이에 대처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6) 自由民主党 政務調査会 国防部会·防衛政策検討小委員会, 「提言·新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国家の平和・独立と国民の安全・安心確保の更なる進展」(2009년 6월 9일).
- 7) 글로벌 커먼즈란 개념은 전 세계의 국가가 왕래에 이용하는 국제공공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로는 공해와 배타적 경제수역과 이에 따른 상공의 공역을 가리킴. 이 커먼즈를 지배한다(Command of the Commons)는 것은, 모든 국가에게 접근을 인정하지만 접근을 거부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의미. 과거 대영제국이 7개 대양을 지배하고 있었듯이, 현재에는 미국이 커먼즈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의 국가에 대해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음. Barry Posen, "Command of the Commons: The Military Foundation of U.S. Hegemony," *International Security*, volume 28, issue 1, pp. 5-46 참조.
- 8) 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会, 「報告書」(2009년 8월). 동 간담회의 좌장이 가쓰마타 쓰네히사(勝俣恒久) 도쿄전력 회장이었다는 점에서, '가쓰마타 보고서'라는 통칭이 사용되기도 함
- 9) 1989년 기준으로 1999년 방위비를 비교.
- 10) 防衛省 宇宙開発利用推進委員会, “宇宙開発利用に関する基本方針について”, (2009년 1월 15일).

편집 고봉준(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JPI 정책포럼 현황

- 이병도 『태국의 국내정치 구도의 평가와 향후 전망: 동아시아 협력의 전망을 중심으로』 (2009년 5월)
- 이재현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국의 과제: 한-아세안의 전략적 협력을 중심으로』 (2009년 6월)
- Belashov Volodymyr 『우크라이나 비핵화 모델』 (2009년 7월)
- 장명봉 『북한의 최근 법제 동향과 전망: 미국의 두 여기자 사건을 계기로』 (2009년 8월)
- 박영준 『일본 민주당의 외교안보정책 구상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2009년 9월)
- 최원기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 한국에의 함의』 (2009년 9월)
- 이성우 『북한의 인권현황과 한국의 인권외교정책』 (2009년 10월)
- 조 현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현황과 전망』 (2009년 10월)
- 황지환 『북한의 최근 대내외 인식과 정책방향』 (2009년 10월)
- 조양현 『한·중·일 3국 협력의 현황 및 전망』 (2009년 10월)
- 주장환 『중국의 소수민족문제와 동아시아 평화의 전망』 (2009년 11월)
- 이춘근 『우주 개발: 쟁점과 전망』 (2009년 11월)
- 최장근 『일본 민주당의 독도정책에 관한 분석』 (2009년 12월)
- 조운영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 (2009년 12월)
- 고봉준 『동북아의 '조용한' 군비경쟁과 북핵(미사일) 실험』 (2009년 12월)
- 박원화 『항공 안전: 국제 및 국내법적 대처』 (2009년 12월)
- 김영희 『독일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 (2009년 12월)
- 윤이숙 『한중일 환경산업기술발전과 정부의 역할』 (2009년 12월)
- 김강일 『중국의 동북아전략과 대한반도정책』 (2009년 12월)
- 고주현 『ARTE TV 정책형성 과정과 한중일 공동채널의 가능성 모색』 (2009년 12월)